

김영종

본회 회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가위기진단과 새 정부의 역할

최근에 우리사회는 제2의 한국전쟁과 방불한 '외환전쟁'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국가부도'라는 상상을 초월할만한 국가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수 있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IMF 바로 직전에는 '뇌물공화국',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 등의 이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흡연인구가 세계에서 최고이다. 그리고 술 소비량도 세계 3위 안에 들고 있다. 이쯤 되면 '흡연공화국' 혹은 '음주공화국' 등의 이름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한국의 교통사고율과 서울상공의 공해정도도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으나 부패학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비용의 정치행정과 경제행위는 정경유착(정치권력과 경제력의 유착), 관경유착(관료의 힘과 경제력의 유착), 권경유착(권력과 금력의 유착), 그리고 신뢰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예컨대 한보사건과 같은

엄청난 정경유착 부패구조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경제외적 고비용이 기업 전체의 흐름을 망쳐놓았고, 최근의 재벌기업의 인쇄부도의 구조적인 여파가 우리 국가사회의 안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둘째, 그동안 우리의 국가발전 정책은 인간발전, 정치발전, 그리고 사회발전보다는 물량적이고 외향적인 성장모형을 추구하여 왔고 중소기업과의 균형발전보다는 재벌 중심과 거점 중심적인 발전모형을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수십년 간의 발전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제야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 모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빵의 크기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갈등과 부패와 불신과 불만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졸부들의 사치와 방종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갈등과 상대적인 박탈감만 조장하여왔다. 가치관의 혼돈과 부패불감증 등의 아노미현상이 팽배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월 13만 3천원을 받는 생활보호자가 총 1백 40만 정도가 넘고 있고, 서울에서만 10만명 가까이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소득 1만불을 넘는 국가이고 세계무역규모액에서 11위에 속하며 OECD에도 가입한 경제성장 모범국이라고 자랑하여야 할까? 이제 외국의 언론은 '경제모범국'이었던 한국이 '부패모범국'이 되었으니 본을 받지 말자고 열을 내어 분노하고 있는데 말이다. 몇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보자. 선거철만 되면 불법, 무법, 그리고 혼탁한 선거문화나 바캉스 철만 지나면 산과 들, 그리고 바다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더미,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달리는 무법천지 자동차 운전기사의 행태, 그리고 몇 푼의 돈을 아끼려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남 몰래 쏟아 버리는 공장폐수방치 행태에서 우리의 국민소득 만불짜리 민주적 시민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시민의식은 과연 얼마짜리 국민소득국의 수준일까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고질적인 부패의 관행은 이제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을 침투하여

부패문화화하고 있어서 그 청산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계에는 기업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푸념이다. 국민의 국회를 텅텅 비워 놓고 그 많은 세비는 염치없이 챙기면서도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신을 받아온 집단이 바로 정치집단이라는 조사보고는 매우 시사하는 점이 많다. 사기업에도 뇌물은 매우 위세를 발휘하나 95% 이상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생존을 위하여 심지어는 사장이 하청과 도급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관계 증업원에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이다. 초중등 교육계에는 아직도 비교육적인 촌지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경찰공무원은 아직도 뇌물을 받고 있다. 바로 얼마 전 MBC 카메라 고발에서 적발된 것처럼 아직도 고속도로의 단속경찰관은 교통위반한 차량에게서 버젓이 뇌물을 받아 챙기는 부패의 관행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1998년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까? 불과 2년 후에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정의공화국호의 출항에 즈음하여 대통령 당선자, 공직자, 그리고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은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야겠다. 출범에는 다음과 같은 항해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새정부는 국민들의 오랫동안의 숙원인 부패방지법을 즉시 입법하고 획기적인 반부패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현행의 반부패제도로는 부패통제를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전천후 부패통제장치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부패의 독립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와 유사한 반부패위원을 조직하여 부패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는 반부패의 교육내용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교과서에 수록 실시하고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회교육기관을 동원하여 전국민이 반부패의 도덕성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돈 세탁 금지, 내부 고발자 보호, 로비금지, 그리고 특히 모범공직자의 발굴과 처우개선 등도 부패방지 차원에서 독립법에서 다루고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 공직자,

부패통제기관, 학교와 사회교육기관, 언론, 그리고 일반시민의 상호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부패관행청산 전략이 시급하다.

둘째, 새정부는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1의 정치철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역대대통령이 거의 예외 없이 정치부패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존경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신뢰도 모두 망쳐버렸던 기억을 한다. 이제 우리는 새대통령이 도덕성에서나 청렴성, 그리고 신뢰성에서 국민들의 가장 모범적인 정치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럴 때에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정부는 국가의 21세기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형과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경제성장을 재벌중심의 불균형정책으로 몰고 왔다. 경제와 정치 및 사회적 발전은 심각할 정도로 불균형되어서 '정치적인 괴리(political gap)'를 불러왔고 국민들은 정치사회적인 불안정과 소요, 그리고 부패를 산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위기와 사회기강의 해이 그리고 부패의 만연은 정치인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새대통령이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삶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세계가 반 부패라운드와 투명성, 정직성, 그리고 신뢰성의 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구경만 할 수 없다.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서 부패청산을 시도하자. 15대 대통령 당선자는 도덕성, 신뢰성, 그리고 청렴성을 가장 중요한 국가지도자의 덕목과 좌표로 삼고 부패관행을 청산하고 21세기의 정의공화국호를 출범시켜야 하겠다. 특히 이 나라 1천4백만의 크리스천들은 '부패공화국'의 청산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정의공화국'의 수립에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